도내 소방청사 차고 중 배연시설 설치된 곳 '無'

성경찬 도의원, "소방공무원 건강 위해 조속 설치해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노력도"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의원이 16일 제377회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소방청사 차고 중 배연시설이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청사 차고는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설치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건립된 안전센터 2곳 역시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배연설비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성 의원은 "도내 202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66.5%로 낮다"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승진독식 유발 소방본부 가점평점 체계 개선을"

박용근 도의원, 행감서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16일 '전북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소방본부는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해 인사평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격무·기피부서를 소방행정과 등 본부부서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소방본부는 소방본부에서 근무할 경우 최고점 2점의 한도 내에서 소방경 이상은 월별 0.015점, 소방위 이하는 월별 0.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연으로 환산하면 각 0.18점, 0.6점으로, 본부부서에서 1년을 근무하면 시.도단위 우수실적 1위(0.3점)에 준하는 가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놓고 박 의원은 "승진이 1점 이하의 미세한 점수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부가 승진을 독식하게 되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박용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는 화재진압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며 "단순히 대원 간 기피현상에 입각할 것이 아닌 많은 도민이 납득할 만한 가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질의에 답변하는 민주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국정감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재난대책체제 전면 개편 이끌어내

문건위, 도민안전실 추가 감사
최훈 부지사, "재난 조례 내용 취지 반영 매뉴얼 재정비 할 것"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10일에 이어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추가 감사를 16일 실시하고, 미진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훈 행정부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비상3단계 미검토 및 유관기관 미소집 ▲유관기관의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참여와 관련해 조례와 매뉴얼이 서로 상이한 점 ▲조례에 규정된 현장상황관리관 미파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홍수통제소 참여 필요 ▲재난부서 근무여건 개선 및 특별사업경찰 확대 필요 등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시인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최훈 부지사는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해 비상 2단계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17개 유관기관 모두가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댐 방류량 결정과정에서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홍수통제소와 소통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상황판단회를 실시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비상단계를 상향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 면서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 17개 유관기관 소집회의를 통해 기관별 협력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기상이변 및 대규모 피해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난부서의 전문성을 제고 및 근무자 인센티브 대책으로 근무경력 가산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경험있는 장기근무자 양성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하고, 2021년 조직진단을 통해 특사경 인력과 조직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이정린 위원장은 "타 광역시·도 사례를 참고해 조례와 매뉴얼 등을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도민들이 마음 편히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전북도가 어떠한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내실 갖춰야"

나인권 도의원, 행감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은 16일 제377회 정례회 2차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행정감사에서 전북도 미래 산업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내실 있는 준비를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은 "현재 도내 탄소산업의 기술수준은 세계 기술수준의 70% 수준으로 탄소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의 기술수준에 비해 5~10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나고 있다며, 선도국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내실 있는 정책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의 미래 산업인 탄소산업은 국가 간의 기술이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천기술과 중간기술의 자체적인 개발만이 탄소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교육위,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천연기념물(제453호)인 남생이가 사육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지난주에 이어 관계자들을 증인 출석 요구해 면밀하게 관련 사안을 살폈다.

최영일 의원은 "묘표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서와 다르게 남생이가 사육되고 있다"며 "인공증식과 자연증식 여부에 상관없이 천연기념물인 남생이가 본래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사육돼야 하는 이유가 없다"며 남생이 구입을 계획·진행한 증인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최영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김정수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전북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전북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 ▲전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전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전북도교육청 원경수업 지원 조례안)의 의안에 대해 심사했고, 5개 의안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됐던 도교육청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호상 기자

"그 어느때보다 강한 도당 청년위가 필요할 때"

이정하 민주 도당 청년위원장 당선인
청년처 신설 · 정책 페스티벌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은 청년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13일 온라인 투표로 선출했다.

이번 경선에는 기호1번 김효빈(84년생,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기호2번 이정하(78년생,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 기호3번 이현세(88년생, 전주시에너지센터 팀장)당원이 입후보 했다.

경선 결과, 선거인단수 23,941명 중 총 2,287명이 투표해 기호1번 김효빈 후보 36.95%, 기호2번 이정하 후보 43.55%, 기호3번 이현세 후보 19.50%의 득표율로, 기호2번 이정하 후보가 당선됐다.

이정하 당선인은 전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번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출마하며, "청년들과 함께 정권 재창출과 청년 성공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공약으로 청년처 신설, 청년정치학교 개설, 정책 페스티벌, 청년축제 개최, 정책 위원회 구성, 행정 공조 등을 약속했다.

이정하 청년위원장 당선인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앞두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합된 전북도당 청년위원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북도당 청년당원을 대변하고, 청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청년위원회 위원장 첫 경선 선출에 대해 "첫 경선으로 선출된 이정하 위원장과 함께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와 청년당원이 하나돼 적극적인 정치활동과 참여로 전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선거에 함께한 기호1번 김효빈 후보와 기호3번 이현세 후보를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 이정하 당선인과 함께 청년위원회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도지사 공약사업인데도 이행률 54%에 불과"

농산경위, 탄소산업 연계 3D프린팅 산업 육성 관련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6일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에너지신산업육성지원사업 등의 신규사업 집행률이 저조함을 질타하고, 연말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 사업기간이 2014년~2022년인 탄소산업 연계 3D프리팅 산업육성은 도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54%에 불과해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전북도의 중점산업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적기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의 효율성과 발전수익, 기술적 문제 등을 지적하고, 주도적으로 수익분석과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도 좋은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기존 동부권 발전사업과 차별화된 고밀도·고집적 신산업 발굴을 통해 동부권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아이템을 발굴, 육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수소차·수소충전소 시범보급계획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도내 24개 충전소가 목표인데, 충전소의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보급이 활성화 돼야 수소차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며 "이용의 불편을 상쇄할 획기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남원의 지역산업으로 화장품 산업이 집적화돼 있는 것에 비해, 허브산업과 연계, 지역산업 생산 및 원료시설 기반 구축 등이 열악한 실정으로, 차후 기술개발 외에도 화장품 디자인, 마케팅 홍보 등과 병행·추진해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긴급차량우선신호 제어시스템 조기 구축 필요"

행자위, 소방본부 행감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6일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소방사 계급의 현원은 정원 대비 약 50%에 불과한 반면, 소방위 계급의 현원은 정원 대비 약 3배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인사적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보고, 효율적인 정·현원 관리 방안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전북도의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이 약 0.6%로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몇 차례 강조한 '긴급차량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일선 시군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하루빨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올해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강제추행, 성매매, 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비위행위가 만연했다며,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감찰 인력을 늘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올해 소방본부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피복을 구입하면서 무늬만 도내업체인 특정업체와 총 25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전국에서 8번째로 의용소방대원 수가 많은 상황인데, 조직 규모를 키우는 것에만 급급하기보다 의용소방대의 운영적인 측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교육을 위해 소집하는 경우 수당지급이 불가능한데도, 부안소방서는 A대원에게 근무시간 및 교육훈련시간 총 21시간을 중복지급해 감사에 적발됐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호내 수질개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 안돼"

행자위, 새만금해양수산국 행감 재실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13일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준비 미흡 등으로 중단됐던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16일 재실시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 상류지역 축산 오염원에 대해 전북도의 지도·점검이 서류상으로 이뤄지는 형식적 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새만금호내 대책과 관련해 현재까지 호내 수질대책의 경우 계속 용역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호내 수질개선을 위해 전북도가 지금과 같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선유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친환경 셔틀버스 등을 통해 선유도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 친환경 고군산군도 관광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낚시 구명뗏목 사업에 현재 8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관련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사고 시 과연 뗏목을 신속히 펼쳐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무주군의회 정례회 개회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16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5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의안으로는 유송열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및 윤정훈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과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2건의 동의안을 심의, 26일 의결할 예정이다.

17~25일 9일 동안은 2020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에는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